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음 4월 19일) 제156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영유아 보육비는 교육청이 알아서 편성해야” 중앙정부 손 들어준 감사원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력 있다”

“의무지출 252억 제외한 990억 재정 여력 있어
부족분 813억 전액 편성 가능”... 향후마찰 우려

감사원이 전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와 예산 편성 전액에 대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향후 진보교육감들과의 또 다른 마찰이 우려된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 편성한 11개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예산을 우선 편성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을 위해 여부와 예산편성의 무가 있는지 여부, ▲교육청이 예산 편성의 재정적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시·도 교육청에 예산 우선 편성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로펌 3곳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인, 정부법무공단 등 7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고, 이 가운데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시행령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놓고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곳,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2곳으로 다수가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01억원, 목적예비비 145억원, 지방세 정산분 100억원 등 추가 세입 943억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299억원 등 990억원(의무지출경비 252억원 제외)의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사진으로 보는 도시경관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시대를 관통하며 변화해온 전주시의 도시경관을 살펴볼 수 있는 전주시 도시경관 사진기록화 사업 사진전이 24일 한지문화센터 2층 기획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현규 시장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확인했으며 누리과정비를 전액 편성치 않은 전북도교육청은 부족분 813억원 전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이미 집행하고 있

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조정해 누리과정비를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미 편성된 사업은 인정하면서 본예산에 미 반영된 추가 세입과 과다 편성된 세출예산 조정액을 활용가능 재원으로 산정했

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이 요구한 공익감사에 따른 것으로 통상의 감사과정보다 단축해 이뤄진 것이다. /고민형 기자

P2P전용대출상품 ‘피플 펀드론’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5일 국내 최초로 P2P플랫폼업체와 업무 제휴를 통해 P2P전용대출상품인 ‘피플 펀드론’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피플 펀드론’은 고객(투자자)과 고객(대출자)간의 금융 거래를 갖는 구조로 P2P플랫폼 운용업체가 중개역할을 하고 은행은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상품판매 및 관리’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해 이뤄지는 대출상품이다.

전은, 오늘 선보여 “운용업체 중개역할 은행은 자금관리 수행”

이를 위해 고객(대출자)는 먼저 P2P업체의 플랫폼 통해 담보 이용신청과 담보이용조건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은행과 담보부 예금이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후취담보조건부 대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P2P업체의 플랫폼이 제공한 대출된 담보예금참가조건을 여유 자금을 보유한 고객(투자자)이 확인하고 조건이 맞을 경우 담보예금에 참가하면 통해 대출이 진행된다. 이 경우 노출된 담보 모집금액에 100%가 모집완료 될 경우에만 취급된다. 담보예금참가자(=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한명의 대출고객의 대출금액 10% 이내, 투자예치금액의 5% 이내 중 적은 금액내에서 투자금액을 제한한다. 또한 분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투자자 1인당 총투자금액을 일반적인 경우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전문투자자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P2P시장에서 여타 P2P업체는 P2P업체의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관리되고 있지만, 전북은행은 JB금융그룹에서 특허출원한 P2P대출투자관리 서비스’를 통해 은행명의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함으로써 P2P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정영수 기자

구단의 베테랑 스카우터, 다섯차례 걸쳐 심판 2명에 100만원씩?...

전북현대, 매수 의혹 파장에 ‘곤혹’

K리그를 선도하는 리딩구단 전북현대 모터스축구단이 심판 매수 의혹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전북현대에 현재 근무중인 스카우터 차모씨가 K리그 심판 2명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돈을 건넨 차모씨와 돈을 받은 심판들을 소환했다고 전했다. 돈을 받은 심판 2인은 지난해 경남 FC에게 돈을 건네받고 유리한 판정을 해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 징역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심판들이라고 전했다. 전북의 혐의는 검찰이 추가조사로 심판들의 개인계좌를 추적하던 도중 경남 FC뿐만 아니라 타 구단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단서가 포착돼 밝혀진

“해당 스카우터,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 축구팬들은 ‘갑론을박’... 구단, 징계 가능성 커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구단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결과, 언급된 ‘프로축구 J7단의 스카우터 C씨’가 구단 스카우터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스카우터는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당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있던 최강희 감독은 “C씨가 조사 받기 전 내게 보고 한 건 없다”며 “다만 조사 받고 나온 뒤 이리저리한 일로

조사를 잘 받고 나왔다 라고만 들어 이런 사안인지는 몰랐다”고 전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언론에 나간 내용이 전부다”며 “돈을 받은 혐의는 확실하나 그 5경기 중에는 이긴 경기도, 진경기도 있어 비전문가인 우리의 입장으로써는 승부조작인지 아닌지는 구분이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축구팬들은 전북구단의 내부조사 발표가 꼬리 자르기다, 사실 일 수도 있다고 나누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

다. 대다수의 팬들은 스카우터가 개인적으로 본인의 돈을 써가며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심판매수에 주도를 한 전북의 차모 스카우터가 전북구단에서만 15년 이상 몸담은 베테랑으로 구단 내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개인 단독으로 주도했다는 전북구단의 조사결과가 무조건 거짓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구단은 이번 사안이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면 연맹은 부

정, 불법행위를 한 구단에게 최하 경고부터 제재금,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승점 감점, 하부 리그 강등 및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 등의 수준 높은 징계가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경남이 받았던 승점 10점 삭감과 제재금 7,000만원 수준의 징계가 부과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의 심판매수 파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 매일 INDEX

5면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하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201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 ✓ 전국유일 홍삼특구!
- ✓ 세계유일 홍삼명인!
- ✓ 국가지정 홍삼연구소의 성분검증!
- ✓ 진안군수 품질인증!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 www.jinansam.com |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